

민주당 당권주자에게 듣는다

김진표 후보

경제 살려 정권 재창출 이끌겠다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전당대회(25일)가 8일 앞으로 다가왔다. 경선이 막판으로 치달으면서 당권주자들의 선거전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광주일보는 당권주자들의 릴레이 인터뷰를 통해 그들의 비전을 조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김진표 후보와의 인터뷰는 지난 15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1시간 동안 진행됐다. 김 후보는 자타가 공인하는 경제통달계 민생 경제 문제를 해결, 차기 총선에서 승리하고 정권 재창출에 나서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나타냈다. 또 소통과 통합의 리더십으로 당내 개혁과 함께 야당과의 전략적 협치에 나서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판세가 골든 크로스를 넘어 선두를 달리고 있다며 승리에 대한 자신감도 내비쳤다. 다음은 일문일답.

-경제 대표론을 내세우고 있다. 경제 해법을 제시한다면.

▲한국 경제는 지난 80년대 말부터 장기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철 지난 '재벌 중심 성장' 정책을 택했기 때문이다. 김대중·노무현 정권은 이를 탈피하려 했으나 재벌의 거대한 벽에 막혀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러한 재벌 중심 성장 정책은 보수 정권에서 더욱 강화되면서 우리나라 경제 체질이 크게 악화됐다. 이제 문재인 정부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야 한다. 그것은 중소·벤처기업 육성이다. 중소·벤처기업 창업 열풍이 불어야 한다. 그래야 경제가 혁신이 된다. 여기에는 금융 개혁이 필요하다. 금융 부문이 가계 대출 등 지나치게 융자 중심이었는데 이제 투자로 전환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중소·벤처 창업 열풍을 일으켜야 한다. 이게 경제를 살리는 가장 빠른 길이다. 이를 지난 문재인 정부 100대 과제에 포함시키고 로드맵까지 만들었는데 관료들이 제대로 추진하지 않고 있다. 오죽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혁신 성장이 더디다고 질책하며 은산분리를 언급하셨는가. 경제 부총리 출신인 제가 당 대표가 된다면 정부 관료들이 함께 될 것이다. 이를 통해 당·정·청이 함께 경제를 살려 나가겠다.

-탁월한 리더기보다는 관리형이라는 평가가 있다.

▲대권형과 빛대어 말하는 것 같다. 하지만 대표가 대권에 눈을 돌리면 당이 망신장이 된다. 이번 대표는 당을 철저하게 관리, 총선 승리와 정권 창출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경제를 살리고 당을 혁신해야 한다. 당의 모든 구성원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네트워크 정당을 만들어야

중소·벤처기업 육성이

경제 살리는 가장 빠른 길

소통과 통합 리더십 강점

야당과 끊임없이 만날 것

평화·정의당과 협치·연대

차기 총선 아무 도움 안돼

한다. 야당과도 끊임없이 만나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소통과 통합의 리더십이 필요하며 제가 이 부분에 가장 감정이 있다고 생각한다. 말로 20년 집권을 얘기하기 보다는 20년 집권을 할 수 있는 당의 역량을 창출하겠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입장은.

▲당의 공약이다. 다음 총선까지 여야 간의 협치가 필요하다. 선거제도 개편은 권력구조 및 개헌과 고리가 연결돼 있다. 여기에 민감한 의원 정수 문제도 있다. 시간이 필요하다. 다음 총선 때까지 개헌특위, 정개특위를 운영하면서 여야 간의 합의를 이뤄야 한다.

-선거제도 개편과 개헌은 올해 내에 어렵다는 것인가.

▲올해 내에는 어렵다. 선거제도 개편만 따로 할 수 없다. 개헌도 함께 논의해야 하는데 개헌은 국정운영 동력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것이다. 올해는 시기가 아니다. 지금은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여야가

힘을 모으고 개혁 입법을 위해 여야가 경쟁해야 할 시기다.

-민주당과 통합의 협치나 연정에 대한 입장은

▲연정과 통합은 1년8개월 뒤에 치러지는 차기 총선에 아무 도움도 안 된다. 평화당과 정의당 다 합쳐봐야 150석도 안 된다. 결국 제2당과의 협치가 필요하다. '보수 궤멸'이라는 소리보다는 현실적으로 경쟁적 동반자로 보고 끊임없이 소통해야 한다. 보수 진영도 예전처럼 발목만 잡을 수 없다. 민생과 개혁을 외면한다면 차기 총선 승리를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개혁 입법 등에 대해서는 평화당 및 정의당과의 공조를 확실히 하는 등 전략적 협치에 나서겠다.

-차기 총선에서 광주·전남지역 전략공천에 나설 것인가.

▲원칙은 경선이지만 목표는 총선 승리다. 솔직하게 후보의 경쟁력이 크게 떨어지면 전략공천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공천을 잘 못해서 호남 기초단체장 몇 석을 잃은 교훈도 있다. 인재 영입과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지역민 심과의 공감 아래, 전략공천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당 대표 선거 판세를 어떻게 보는가. 승리의 근거는.

▲초기에 잘못된 여론조사 등에 따라 '이해찬 대세론'이 형성됐다. 하지만 일반 국민여론조사는 사실성 인지도 조사에 불과하다. 전체 투표 비율의 85%를 차지하는 대의원,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에서는 제가 선두권이다. 당장 수도권에서 우세를 굳혀가고 있다. 여기에 호남과 영남에서도 상승세를 타고 있다. 이번 주말을 계기로 골든크로스를 넘어 확실한 선두로 자리 잡을 것이다.

-당내에 호남의 목소리를 반영할 방법은.

▲호남균형발전 특위를 구성하겠다. 광주형 일자리, 에너지밸리, 문화수도 등 문재인 정부 5개년 계획에 포함된 사업들을 중심으로 호남 현안을 철저히 관리하겠다. 또 호남 현안 사업에 대한 정부의 예산 편성단계에서부터 상임위와 예결위 진행 상황까지 꼼꼼하게 챙길 수 있도록 책임 의원제를 운영하겠다. 호남은 나라가 어려울 때 언제나 결단하고 행동했다. 이러한 호남 정신은 민주당의 근간이다. 결국 호남 없이는 총선 승리도 없고 정권 창출도 어렵다. 특히, 호남의 성공은 기울어진 국가균형발전을 넘어 동서갈등을 풀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길이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민주 당권주자들 경제·평화 키워드 정책 행보

송영길 "민생 당대표 되겠다"

이해찬 "개성공단 정상화"

김진표, 전북지역 당원 만남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들은 16일 정책 행보에 주력하며 경선 중반전을 대비했다.

송영길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정부의 경제 정책 3개 축인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에 '민생'이라는 4번째 축을 덧붙이는 '민생 당대표'가 되겠다고 밝혔다.

송 후보는 또한 국가 을지로위원회를 신설하고, 기존의 당 을지로위원회 권한을 강화하는 한편 매달 한차례 지도부가 민생현장을 찾아가 최고위원회의를 열겠다고 공약했다.

김진표 후보가 '유능한 경제 당대표'라는 구호를 들고 나왔고, 이해찬 후보가 '민생경제연석회의'를 구성해 노동자와 머리를 맞대겠다고 공약한 데 대한 송 후보의 대응책으로 보인다.

송 후보는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집값의 10%만 있으면 집을 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제 공약을 이해찬 후보가 어렵다고 했다. "세대차이이고 상상력의 빈곤"이라고 공격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해찬 후보의 '1강'으로 나타난 일부 여론조사에 대해 "모집단과 기준치에 따라 다르다"며 "트렌드가 확실하 저의 상승세라고 현장에서 느끼고 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이해찬 후보는 한반도 평화에 방점을 찍는 행보를 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경기 파주 남북출입사무소를 방문해 '민주주의와 평화는 하나입니다'라는 주제

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회견문에서 "한반도 경제공동체의 미래상을 보여준 개성공단의 폐쇄는 명분도 책임도 없는 결정이었다"면서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해 민주당이 앞장서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밝힌 동북아 공동번영 구상에 대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한 길을 걸어온 민주당 정부다운 제안"이라 평가하며 "적극 지지한다"고 말했다. 김진표 후보는 이날 오전 전북 지역을 찾아 대의원·당원들과 만나는 비공개 일정을 소화했다. 김 후보 캠프 관계자는 "보여주기식 일정보다 당원과 지지자를 직접 만나 현장 목소리를 듣는 일정을 주로 하고 있다"며 "오늘도 서울시장 직능 위원회와 대의원 간담회 등에 참석했다"고 전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낮 청와대에서 여야 5당 원내대표와 오찬을 함께하기 앞서 차담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민주평화당 장병완, 바른미래당 김관영, 자유한국당 김성태, 문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직무대행. /연합뉴스

문대통령·5당, 여야정 상설협의체 가동 합의

원내대표 청와대 오찬 회동...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요청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16일 청와대에서 오찬 회동을 갖고 남북 정상회담 등 남북교류에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본격 가동하는데 합의했다.

이날 회동 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과 민주당 박경미 원내대변인, 한국당 신보라 원내대변인, 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합동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이 이런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찬에는 민주당 홍영표·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 김관영·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와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직무대행 및 5당 원내대변인이 참석했다.

이날 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들은

국회와 정부, 여야 사이의 생산적 협치와 원활한 소통을 위한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분기별 1회 개최하기로 했고, 필요 시 여야 합의에 따라 추가로 개최하기로 했다. 첫 협의는 2019년 예산안 시정연설 이후인 11월에 열기로 했다. 또 '민생과 경제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하고 여야는 민생법안과 규제혁신 법안을 조속히 처리한다'는 데에도 합의했다. 이를 위해 국민안전 법안,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저소득층 지원 법안,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 법안 등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다만 정의당은 규제혁신 법안에 대해 의견을 달리한다고 명시했다.

또 문 대통령과 여야 5당은 "3차(남북) 정상회담 성공적 개최에 협력하고 지

원한다"고 합의했다. 이들은 "한반도 비핵화의 진전과 평화정착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한다. 남북의 국회, 정당 간 교류를 적극 추진하며 정부는 이를 지원한다"라는 내용을 합의문에 담았다.

이날 회동에서 문 대통령은 "다음 달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는데 판문점 선언에 대해 국회와 비준동의를 해주신다면 평양 정상회담에서 훨씬 더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8월 국회에서 판문점 선언 비준이 이뤄질 것이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선거제도 개편 논의와 관련, "지난 개헌안 제시 때 내용을 담았는데 비례성·대표성을 보장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편을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강조, 국회 차원의 조속한 합의를 당부했다. /임동욱 기자 tuim@

Advertisement for Shinsegye Eye Clinic. Title: 두 눈에 청춘을, 신세계안과 노안수술. Features: 카탈리스 레이저 노안수술 2,000례 달성, 다초점 렌즈 삽입술로 노안 해결, 다양한 다초점 렌즈 보유하여 눈에 가장 적합한 렌즈 삽입, 각막 후면 난시 제거 수술이 가능한 '카시니' 장비 도입, 수술결과를 향상시키는 안구 네비게이션 '베리온' 도입, 1 DAY 노안수술 가능, 백내장 진단 시 실손보험 적용 가능. Contact: 신세계안과 1566-9988.

Advertisement for Haegeon Development. Title: 농촌의 새로운 희망. Features: 농촌 태양광 농업진흥구역 규제완화, 대통령령 제28838호, 5년거치 10년상환, 년 1.75% 가능, 90% 용자 지원 사업 선착순 접수. Includes image of solar panels and a woman. Contact: (주)해가온개발, 상담 전국대표 1588-1543, 이길영 010-3645-1479.